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오주승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학자들이 미국 건국 200년을 맞아 역대 대통령 41명(조지 부시·현 대통령 제외)의 순위를 매겼다. 평가 결과는 '위대한 대통령, 끊임없는 대통령'이란 책으로 국내에서도 출간됐다. 평가 분야는 지도력·정치력·도덕성·위기 관리능력·인사 등 5개 항목. 그 중에서도 인사 부분이 눈에 띈다.

인사 분야 1위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토마스 제퍼슨과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용해 내각의 조화를 이뤘고, 대법원장에 존 제이를 기용해 삼권분립의 기초를 닦았다.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널리 구했다는 점에서 역대 1위에 올랐다.

한국사회는 공직 경매중

풀씨는 29대 대통령 위伦 G. 하딩. 그는 워싱턴과 정반대였다. 우선 내각의 중요 한 자리에 어린 시절 친구들과 백악관 포커 게임 멤버들을 대거 기용했다. 능력 없는 자들의 발탁에 따른 당연한 결과지만, 협잡과 공직매매, 범죄자 사면 등 정부의

모든 일이 돈으로 사고 팔렸다. 결국 하딩의 시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시기로 기록됐고, 그 또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는 불행으로 끝났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만 4개 월이 되는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일 하나님 만은 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 4개월

‘호남 왕따’ 시작됐나

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으로 축발됐지만 지지를 급락의 밀비다에는 형편없는 인사가 있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강부자’(강남 땅부자)에 이어, ‘만사는 형(이상득 의원)’을 통해 ‘한다’는 ‘만사형통’이란 말로 이명박 인사는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 뿐인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놓고 선거캠프의 논공행상이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공직 경매이자, 선거 승리에 따른 전리품 경기이다. 전리품의 최우

선 순위는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는 공공기관·공기업의 사장이나 이사장 자리. 법으로 정해진 임기와는 무관하게 강요된 밀어내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들은 주요 언론 기관을 장악했다. 선거캠프 일을 했던 사람을 무더기로 외교관으로 보냈다가 말썽이 나자 철회하고,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 영사를 경질하는 외교적 결례증은 무시됐다.

그러나 하딩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듯 자신과 친한 이너서를 인맥만을 기반으로 한 ‘코드 맞추기식 둘러막기’와 ‘회전문 인사’는 국정 파탄의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호남이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집단 왕따’ 조짐이다. 왕따는 은밀하다. 곁으로는 뚜렷히 표가 나지 않는다. 정부는 공정한 인사를 외치고, 인구 대비 산술적 평균으로 포장된 통계수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호남 인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전혀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인촌 장관 해프닝. 평생을 ‘고향은 서울 종로’라고 밝혀온 서울 토박이 유 장관이 갑자기 호남 사람으로 둔갑했다. 부모님이 잠시 피란간 전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호남 사람이라는

정부의 출신지 분류는 기가 막혔다. 호남 인에 대한 현 정권의 이율배반적 인식을 드러낸 한판 코미디였다.

진보정권 10년 균형 무너져

이명박 인사의 결정판은 지금 공기업·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강제로 밀려난 광주·전남 출신 공공기관장은 10여명, 또 다른 10여명은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런 식의 퇴출이 고위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중·하위직까지 무차별적 칼바람이 불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동안 채용된 중·하위 계약직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일찌감치 퇴출대상으로 찍혔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따위는 무시됐다. 오직 어느 시기에 채용됐느냐가 기준이다. ‘공직 구조조정’을 표면적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다.

호남 출신 공직자들도 좌불안석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소속인 이정현(곡성 출신) 의원이 “특정지역(호남) 출신 공직자들은 현재 숨죽이고 있다. 탕평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을까.

그런 사이 수십년간 정부 인사에서 소외됐다가 진보정권 10년사이 어느 정도 맞춰진 인사 균형이 뿌리째 훤흔들리고 있다. 정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기다.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시 설

국책·공약사업 예산까지 대폭 삭감할 건가

광주·전남의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여수엑스포,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에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은 심각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8% 삭감돼 기획재정부로 넘겨졌다. 광양항 관련 예산도 26% 삭감될 예정이고 여수엑스포 국고지원사업 예산은 2천500억원이 필요하지만 국토해양부가 1천 800억원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예산도 마찬가지다. 고속철도는 2012년까지 조기 완공하려면 용지보상과 기본설계 변경 등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지만 반영된 예산은 당초 2017년 완공 계획상의 재정운용액보다 줄었다. 이런 상태라면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 불가능하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국책사업이거나

비리·추문 광주시의회 ‘시민의 대표’ 맞나

광주시의회가 잇단 추문과 비리 의혹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성폭행 의혹에 연루돼 있는가 하면 모 의원은 복지법인 인가과정에 부당하게 입하고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겼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가 아래도 되는 것인지 부끄럽기 짙어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의원을 윤리위 원회조사 회부하지 않는 등 제 쇠구 감싸기로 급급한 광주시의회 태도다.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성폭행 연루 의혹으로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음에도 시의회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가 어떤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은 물어나지 않는다.

시의회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제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혜신요구를 묵살해 빙족을 사고 있다. 광주YMCA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의장선출 방식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19명의 의원 가운데 3명만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2년 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은 의원 자질 향상과 전문화를 진심으로 원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최근 행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꼴이다.

시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시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민주당 일당 독점체제가 가져온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민주당 공천만 따면 당선된다는 사고가 지역정부에 팽배해 있는 한 자질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시의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면 시

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비도덕적인 의원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불행한 사태

가 오지 않도록 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당포’하면 후미진 뒷골목에 음침한 모습부터 끌어올리게 된다. 40대 후반 이상의 어른들은 어린 시절, 급전이 필요할 때 괜찮게 산다는 친구의 손목시계를 빌려 전당포를 이용했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당포는 동전이 나온 고려 시대에 등장했다. 최고로 쳐주던 품목은 1950~60년대 재봉틀, 70~80년대 오리엔트 시계와 TV,

90년대 링크 코트였다. 이후 사라지는 듯 하던 전당포가 최근 노트북에서 명품을 최고로 쳐주며 고급화의 대열에 합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너희가 명품을 아느냐’ 같은 애세이로

이튿날 일본 작가 나카무라 우사기의 작품에는 고급화된 전당포의 풍경과 함께 명품 중동증 고백이 배어 있다. 명품 수천만원어치를 단 하루에 사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하는 수 없이 빚을 갚기 위해 명품을 들고 전당포를 찾았지만 빚을 갚는 대신 또 다시 명품을 사고 만다는 내용이다. 명품 중동증이 어지

간판까지 내건 ‘명품 전당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명품이 싫증 난 사람, 또 다른 명품을 사고 싶어 명품을 맡기는 사람들을 겪는다.

서민 애환이 담긴 전통의 전당포들은 사라지고 허영을 자장하는 전당포들만 득실거리는 것 같아 못내 슬프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학교는 □다

정 범 도



교육당국이 ‘학교는 □다’라는 캠 페인트를 펼치고 있다고 한다. □안에 긍정적인 내용을 채우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한국의 교육현실은 ‘학교는 죽었다’, 학교는 미쳤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까지 우열반을 편성한다고 하지 않는가? 서울의 학원에서 밤 11시까지 수업을 하고 버스로 경기도로 옮겨 새벽 2~3시까지 학원과 외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교육열이 유난히 높은 우리 한국의 학부모들은 영혼이라도 팔아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한다. 아무리 박봉이라도 영어, 수학, 논술 등 기본

교과에서도 사교육 시장은 커질대로 커져 한국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도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사교육 관련주들을 집중 매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이제 교육 주권마저 미국으로 넘어가 버린다. 한·미 FTA가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래서 사교육 관련주가 떨어진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 사교육 시장에 투자한 미국 자본의 요구에 의해 ‘투자자 국가 제소제’를 들고 나올 것이 뻔하지 않은가?

그런가 하면 지난 17일에는 제3차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 학교가 결정되었다

기

고

이동범



지난해 4월 참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 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통과시켰다.

또 1차 시범 적용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고, 입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10월 중순 2차 시범 적용 학교를 대의 발표없이 강행했다. 그 결과 교사에서 교장으로 진출한 무자격 교장은 전국적으로 1차 8명, 2차 9명으로 총 17명이 임명하고 있다.

교장 승진 제도가 없다고 해서 교장

에 있는 제도를 통해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유도하고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는 이 제도를 통해 교원의 과열 승진 풋풋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교장공모제가 도입된다면 교원들이 승진으로 인한 교육력 낭비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오히려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예전보다 경쟁자가 많아져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교장 임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교장 승진 제도가 없다고 해서 교장

무자격 교장 공모제 유감

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신청 대상을 보면 내부형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교원,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개방형은 당해 학교 교육과정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이중 초빙형을 제외하고 내부형이나 개방형은 무자격 교장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뻔히 보인다. 이미 공모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교사들의 생각이 다양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문제는 없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자격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교장의 자격 요건 및 연수체계 강화, 교장 재임용의 엄격한 적용 등 기준

이 되려고 경쟁하는 대신에 교사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 상위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상위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면 그 욕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가 학생들의 교육에 진정 좋은 것이라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공모제는 논리적으로 볼 때 교장의 전문성이 역할에 반영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볼 때 단위학교가 선발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전문성과 책무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이라도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재고 또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전 광주대성초 교장·광주여대 객원교수>

학교 앞 문방구 어린이들에게 외상 거래 ‘총격’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요즘 부적 장난감을 사들였다. 이상해서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모양을 봐뒀다가 일요일 오후집 앞 문방구에 가서 가격을 물었더니 용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제품들이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불잡고 물었더니 아이가 태연한 얼굴로 하는 말 “엄마, 그거 외상으로 샀는데!”

신용이나 절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이 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또 아이는 절이 없어서 그랬다지만 문방구에서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외상을 줄 수 있는지? 화가 나서 문방구로 쫓아간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우리 아이 뿐 아니라 외상을 하는 어린이 전용 ‘외상 장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이미경·광주 북구 태령동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사 회 2 부	2200-619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화 흥 보 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551
면 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6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